



전국혁신도시협의회 · 혁신도시지역 국회의원 · 지역 대학 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 35% 이상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 -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당론 채택을”

(혁신도시 공공기관)

전국혁신도시협, 여야 3당에 '1단계 35% · 2단계 50% 법제화'

혁신도시 국회의원들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 집중화 등 막아야”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국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지역 대학생 대표들 여·야 3당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창희 전주시장 등 혁신도시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 전국 지역 대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김부겸 의원(대구수성갑), 이철우 의원(김천), 김기선 의원(원주갑), 김광수 의원(전주갑), 정운천 의원(전주을), 송기현 의원(원주을),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에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지역은 끝없는 청년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전국의 혁신도시 지역청년들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들고 조성된 혁신도시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전국 평균 13%에 머물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률로 인해 희망이 아닌 절망을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은 단순한 청년일자리 차원을 넘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기업이 일자리를 보장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을 것이고 지역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일명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발전 희망의 불꽃을 터뜨려”고 호소했다.

혁신도시 지역 청년 대표로 참석한 한승진 전북 총학생회 협의회 의장은 청년고용절벽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

로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토로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을 조속히 법제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혁신도시 국회의원들도 지역인재 채용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의 안전망을 만들 것을 다짐하면서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을 촉구하는 것은 전국 시·도의 지방대학생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수도권집중화에 따른 지역불균형 발전을 놓고 봤을 때 무리한 주장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1단계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5%를 의무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50%까지 채용할 수 있는 법제화를 통해 지역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등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를 찾아갈 방침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이날 합동기자회견에 이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비서실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한 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재 기자

▶ 매일 INDEX

4면 호사량쟁례문화원 추진 놓고 갈등 고조 7·16면 민선6기 2년 장수·부안군 결산

후삼국 건물지 추가 발견

완주 봉림사지에서 후삼국시대 건물지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북대 박물관의 긴급 발굴조사를 통해 10세기 후반제 시대 사찰터라는 역사가 재차 확인된 것이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과 완주군은 지난해 8월 긴급 발굴조사 이후 좀 더 명확한 사찰의 성격과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까지 연차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전북대, 완주 봉림사지 긴급 발굴조사서
 원삼국 주거지도 확인

이번 조사에서 전북대 박물관은 후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회랑형 건물지와 고려~조선 시대로 보이는 건물지 10여 기 등을 추가로 발굴했고, 다른 지점에서도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2기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회랑형 건물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성과라고 밝혔다.

‘L’자 형태로 확인된 건물지는 방형의 적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단축 14m, 장축 30m, 중심 간거리 4~4.4m에 이른다.

현재로서는 남쪽편 절반 정도는 확인됐는데, 향후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U 형태의 회랑 또는 정면 7칸, 측면 3칸의 대형 건물지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건물지를 조성할 때

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졌음이 토층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 건물지는 중첩관계로 볼 때 다른 건물지들보다 가장 이르고, 선문과 격자문이나 시문된 기와가 다수 발견됐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 건물지는 후백제기로 판단된다고 전북대 측은 밝혔다.

이외에 봉림사지에서는 후삼국~고려, 일부 조선시대의 다양한 기와편, 청자편, 분청사기편, 연질 및 경질토기들이 출토됐다.

특히 12세기를 전후하는 청자가 대종을 이루며, 중국계 자기로 추정되는 청자편들도 확인됐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봉림사지는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앗을지라도 후삼국시대~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명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주변 지역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봉림사지의 가람배치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흥호 전북대박물관장은 “지난해에 이은 이번 추가 발굴을 통해 완주 봉림사지가 후백제 시대 사찰이라는 점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건물지 배치와 상관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출토 유물의 연대를 검토하는 한편, 봉림사지의 온전한 가람배치를 확인하기 위한 연차조사의 토대로 마련해 완주군의 귀중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의회

생활임금제 도입, 노조법 개정, 예산안 통과, 민선6기 2년 장수·부안군 결산

녹색성장
 690건 의안처리
 마을만들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지역발전기금
 교육발전 민간협력위원회 설치
 전북관광 패스라인 민간위탁
 차관학교 협성과 농촌산업지원

고향기부제
 문화예술포럼 지원 조례
 문화예술포럼 지원 조례
 문화예술포럼 지원 조례
 문화예술포럼 지원 조례

조례재개정 전국2위
 전북교육재정 확충 방안 지역발전기금
 교육발전 민간협력위원회 설치
 전북관광 패스라인 민간위탁
 차관학교 협성과 농촌산업지원

생활임금제 도입
 노조법 개정
 예산안 통과
 민선6기 2년 장수·부안군 결산

민권보호
 다자녀공무원 인사가점 가뭄대책
 성안음보행기 조영 개정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인권보호
 다자녀공무원 인사가점 가뭄대책
 성안음보행기 조영 개정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피어라! 도민행복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라북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 전라북도의회
 www.assem.jeonbuk.kr